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선정특위 구성...금주 첫 실무회의

이달 내 예비→공식 후보지 격상 전망 연내 이전부지 확정 마무리 여부 주목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6월 중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무안을 공식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최종 이전부지 확정 작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무안군 등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이달 초 구성됐다. 이번 주에 국방부에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첫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광주시장),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무안군수),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광역자치단체장(전남지사)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차관 등 위촉직 위원까지 총 20명 이내로 구성됐다.

실무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국방부·국토부 차관, 전남·광주·무안 부단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이르면 6월 중 공식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예비후보지 내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 전경. /광주매일신문DB

체장이 참석한다. 회의 장소는 국방부로 날씨는 아직 미정이다.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무안이 단수 선정된 만큼 복수 후보지일 때 거쳐야 하는 후보지 검토와 후보지 간 경합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6월 안에 이전 후보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2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다.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충족 여부,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 종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이전후보지 선정을 의결할 수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이전 사업지원위원회' 구성도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원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실행 계획 등을 심의하며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꾸러질 전망이다.

군공항 종전부지인 광주시는 현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기획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지인 무안군 또한 이달 내로 이전주변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성 검토 후 광주시에서 이전주변 지역 지원 사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최종 이전부지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4월21일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사업이 최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으로 탄력을 받은 만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방침에 발맞춰 연내 이전부지 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당초 후보지 확정을 1년 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연내 후보지 확정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며 "매우 압축적으로 추진 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확정, 주민투표 등 향후 절차가 적지 않아 연내 이전부지 확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전 주변지역인 무안군에 대한 정부 지원안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전폭 지원 방침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향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무안군민 의견 수렴을 주력하며 투명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시도민회 상생협력 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상생협력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구례·보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2027년까지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주민 생활 안정·삶의 질 향상 등 기대

전남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구례군과 보성군 주민은 올

해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전남에선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구례군, 보성군까지 선정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소비를 늘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소비처로 사회적농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구례군·보성군과 함께 기본소득 사업별 전역을 선제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된 후 곡성군·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맹점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글로벌 마이스터' 국내연수 운영

직업계고 20명 산업현장 체험·특강

전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4일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남까지 이틀간 '2026년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국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연수 첫째 날에는 미래 마이스터로서의 역량

과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 탐방과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중심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기술, 나만의 커리어캐리터 설계 등을 주제로 취업역량 강화 특강을 통해 연수생의 진로 설계와 실무 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국내연수에 이어 오는 8월에는 독일에서 8일간 국외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19일까지 가입하세요"

전남도, 보험료 90% 지원

전남도는 14일 벼 재배농가에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장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오는 19일까지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

정을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벼멸구, 도열병 등 병해충 7종 피해도 주계약으로 보장해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보장 대상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잎마름병이다.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

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1ha 당 평균 보험료는 약 52만원이며 농업인은 10%인 5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친환경 유기 인증 필지에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9일까지 신분증과 경작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호우, 깨씨무늬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벼 재배 농가 1만4천농가에서 보험금 830억원을 받았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